

IV. IMF 시대를 넘는 지혜

금융부터 달라져야 한다

1997년은 연초 금융개혁위원회의 설립에서 시작하여 연말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마감한 매우 불행한 한해였다. WTO 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경제의 대외 개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금융 부문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것이 이번 경제 위기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동남아 금융위기 등 외부 여건도 있었지만, 그러한 외부 충격을 그대로 내부화한 취약성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취약성으로서 1) 정보의 불투명성, 2) 시장원리의 작동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의 투명성이 문제다

IMF의 정책 지침은 한국 경제의 대대적인 부실 정리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그 전에 빚발친 요구 사항은 믿을 만한 금융 통제였다. 단순히 통제치가 틀렸다는 기술적 비판이 아니었다. 즉, 모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감시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그야말로 투명한 정보 유통이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인 것이다. 결국 실제 경제 운용상 작의적인 실적 작성과 공시가 이루어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각 부문간, 기관간, 나아가 조직내에서조차도 '정보의 불유통'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경제 운용상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이 심각한 지경에 달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바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성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거시적인 효율성이 추구될 수 없게 되었으며, 시장을 통한 미시적인 효율성 추구가 요구되는 시대다. 즉, 경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과거 일선의 담당자와 행정 관료만 알면 되던 것이 대외 공시의 의무가 가미되고 특히 금융시장에 의한 정보의 유통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들간에 필요한 의견조율 작업은 이제 새삼 힘든 고통의 순간을 자아내고 있다. 청산해버리기에는 그 정리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처방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식 발표된 금융권의 부실 규모는 81조 원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원리의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정부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의 인지와 판단, 해결 수단의 모색 등이 바로 시장 현장에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대안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금융 부문에 있어서 수많은 개선 과제와 수단이 제시되어 왔으나, 결국 의사결정권자는 시장 현장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이해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 따로, 시장 따로의 의사결정으로서는 결국 비용만 많이 드는 정책 선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시장원리의 작동은 가장 간단하게, 시장의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을 발견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금융 구조조정의 지상 과제는 효율성이다

금융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체가 지금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 있어 재원 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구조조정 방안들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들이 발표되거나 정부기관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향후 금융 구조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투명한 정보 유통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시장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시킴으로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이 드는 구조조정 작업이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의 사업 부문, 자산·부채 등을 총망라하여 투명한 정보가 집결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을 정리하는 시장의 힘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임진국 jklim@hri.co.kr 2724-4018)